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홍 대 식**

임 덕 기***

목 차

- | | |
|---------------------------------|-------------------------|
| I. 서설 | 1.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
| II.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개관 | 2.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의 문제점 |
| 1.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법률 현황 | 3.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추진체계의 문제점 |
| 2. 분야별 인터넷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관련 법률 현황 | 4.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보호체계의 문제점 |
| III.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의 문제점 | 5. 인터넷 자율규제 추진체계의 문제점 |
| | 6. 국제협력 추진체계의 문제점 |
| | IV. 결론: 개선방안 |

I. 서설

현재 인터넷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국¹⁾, 유럽연합²⁾, 독일³⁾, 영국⁴⁾, 프랑스⁵⁾, 일본⁶⁾ 등

* 본 연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과제 보고서인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진흥 법제 체계화 연구'의 내용을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임덕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팀 선임전문원, 서강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1) 미국의 경우, 그동안의 정부 불간섭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위 '인터넷 정책 3.0(Internet Policy 3.0)'이라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 정책 3.0(Internet Policy 3.0)은 이전의 방임적 혹은 소극적인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미국

해의 주요국들은 융합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선도적 국가 경쟁력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인터넷 진흥을 위한 국가전략 구축과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⁷⁾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법제의 경우 정부부처의 기능 중복과 담당부처의 다각화로 인하여 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전략적인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⁸⁾ 특히 정

의 인터넷 정책에서는 인터넷에 대해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라는 입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인터넷의 보호라는 입장 선회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 2) 유럽연합은 초고속 인터넷 망과 상호운용하는 인터넷 적용에 기하여 디지털 역내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 유용성을 도출한 아젠다 제출을 통하여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유럽연합이 직면하게 될 향후 수십 년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다.
- 3) 독일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계속적인 확충, 클라우드 컴퓨팅, 전기자동차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투입 등과 같은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는 등 인터넷의 전략적 의의에 주목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헌법에 제91조의c를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IT 정책을 통일적으로 수립·집행하고자 한다.
- 4) 영국의 인터넷 진흥정책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적인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한 미래 디지털 지식경제 국가로의 전환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5) 프랑스의 인터넷 진흥 관련 법률이 갖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의 주요 산업인 각종 지식 자산의 보호와 육성에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부속 법률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의 또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 6) 일본에서의 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는 통신·방송의 통합법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은 통신·방송의 통합의 상황에서 종래의 8개의 법률로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세분화된 법체제가 일본의 정보화 사회 축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종래 통신·방송 관련 8개 법률을 4개로 통합하는 수준에서 법체계 정비를 구축하고 있다.
- 7) 국내에서 인터넷은 2010. 5.을 기준으로 만 3세 이상 인구의 77.8%인 37,010,000명이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82.5%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시간도 주 평균 14.7시간, 1일 평균 2.1시간이며, 절반에 가까운 48.9%가 주 평균 1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하여 시장규모가 6.92배 확대되고 있고, 사이버쇼핑 거래액도 2001년과 비교하면 시장규모가 7.52배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 및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0. 12. 참조.
- 8) 현행 인터넷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2008. 2.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부 부처 간 기능중복 및 담당부처의 다각화로 인하여 정책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며, 정책 추진체계의 충돌에 따라 인터넷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인터넷 정책의 통일성이 없고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곤란해질 수 있으며, 예산집행 및

책추진 부처 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조정해줄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는 법적 규율 중첩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 규율 공백의 문제가 있어 급변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국내법의 역외적용상의 문제와, 자율 규제와 합리적인 모델 설정과 육성, 지원 규정 미비의 문제, 인터넷 관련 주체들 간 역할분담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인터넷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의 문제 등의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를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개관

1.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법률 현황

정부가 정보화와 인터넷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규정은 다양한 법률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⁹⁾에 따라 정보화 관련 법률들은 다음과 같이 그 주무 부처가 변경되었다. IT 분야에서는 구 정보통신부의 국가정보화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를 행정안전부 위주로 개편하였다.⁹⁾ 지난 2008년 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국가사회 정보화와 공공정보화로 이원화된 정보화 기능을 통

관련 사업자와 서비스의 관리·감독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9) 이는 참여정부시대 이래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추진의 주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구 정보통신부가 지속적으로 충돌해 온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구 정보통신부는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구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화추진체계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산화 문제의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설정했기 때문에 양자 간에 관할권과 추진체계를 놓고 갈등이 계속된 바 있다.

합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정보화 정책 추진의 초석이 놓여졌다. 2008년의 개정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의 법률들이 구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그 밖에 다른 정보화 관련 법률들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법제도의 체계는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과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별로 각각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¹⁰⁾

〈표-1〉 현행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률 현황

법률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정보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중개(포털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문서교환(EDI)서비스	전자문서중계자
	집적정보통신서비스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자지불서비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전자거래사업자
	전자문서보관서비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중개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지불서비스	결제수단발행자
	전자상거래(B2C, B2B)	전자상거래사이버몰운영자/사업자

10) 1986년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그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고, 1983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도 33차례 개정되는 등 정부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들 법률들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새롭게 출현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고 필요한 규율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지불서비스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 /가맹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언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 언론	인터넷신문사업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언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게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오락정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오락정보	디지털시네마
이러닝(전자학습)사업 발전법	교육정보	이러닝사업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정보제공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센서정보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터넷광고	인터넷 광고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aaS/ASP 서비스	소프트웨어사업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문서교환(EDI)서비스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물류정책기본법	문서교환(EDI)서비스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국가 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자
전자서명법	인증서비스	공인인증기관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기기인증서비스	전파연구소장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P2P 서비스	P2P 서비스 사업자
	웹하드 서비스	웹하드서비스 사업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관리서비스	인터넷주소관리기관 (관리대행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안관리서비스	정보보호컨설팅 전문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

2. 분야별 인터넷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관련 법률 현황

「국가정보화기본법」¹¹⁾ 하에서 정보화 추진에 관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분야에서의 인터넷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전자정부법」¹²⁾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통신과 관련하

11) 국가정보화기본법[(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하고 안건검토 및 심의를 위한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정보화 추진, 관련 정책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 국가 사회 전반의 정보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동법은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2009년 5월 22일 전부 개정되어 2009년 8월 23일부터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명명되었다. 동법은 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육성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 중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12) 전자정부법[(타)일부개정 2011.4.12 법률 제10580호]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안전부 등의 각 중앙사무관장기관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다.

여 「정보통신산업진흥법」¹³⁾ 과 정보통신망법이 있다.¹⁴⁾ 한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¹⁵⁾이 있으며, 이 법 하에서 인터넷 분야를 포함한 전기통신 분야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¹⁶⁾ 및 인터넷 관련 사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정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¹⁷⁾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¹⁸⁾이 제정되었고,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규율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¹⁹⁾ 제

1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타)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56호 시행일 2012.1.26.]은 지식경제부를 소관부처로 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두고 있으며, 동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조성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시행일 2012.9.16.]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하고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한 정보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국가정보화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정 2010.3.22. 법률 제10165호]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하고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16) 전기통신기본법[(타)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93호]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고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 마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5조).

17)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56호 시행일 2011.11.20.]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82호]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고 있다.

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57호 시행일 2012.1.15.]은

정되었다. 이외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²⁰⁾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사업법」²¹⁾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장치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²²⁾이 있다. 전자거래 영역에 관한 법률로서는 「전자거래 기본법」²³⁾과 「전자서명법」²⁴⁾, 「전자금융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다.

- 2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타)일부개정 2009.5.22. 법률 제9708호]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로서 지정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인터넷 서비스의 진흥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이러닝산업 발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 획의 수립)	제4조(공간정보산업진 흥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21) 정보통신공사사업법[(타)일부개정 2010.4.12. 법률 제10250호]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있다.
- 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1.03.30. 법률 제10517호 시행일 2012.3.31.]은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하에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 23) 전자거래기본법[(타)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54호]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거래법」²⁵⁾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²⁶⁾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이용자 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²⁷⁾과 「콘텐츠산업 진흥법」²⁸⁾이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²⁹⁾

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 24) 전자서명법[(타)일부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5) 전자금융거래법[(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303호]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편익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다.
- 2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4.14. 법률 제10591호]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식경제부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지식경제부 소속)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다.
- 27)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한다.
- 28) 콘텐츠산업 진흥법[(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주무부처로 한다. 이 법은 정부로 하여금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고 있다.
-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와 한국영상자료원(문화체육관

이 개정되었다. 한편 사법 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³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³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Ⅲ.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의 문제점

1.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현행 법제도상 인터넷 서비스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합적 추진체계의 부재와 전문성 약화이다. 현재 인터넷 관련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미래 인터넷 시장 및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 진흥정책 추진체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분산은 각 부처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제고되는 순기능의 발현을 기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순기능이 발현되기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정책의 적극적 추진 역량이 분산되어 동력을 잃은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인터넷 서비스 진흥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통합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조정 기능만으로는 통합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기

광부 산하)을 두도록 하고 있다.

3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10.3.24. 법률 제10183호]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1)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12호]은 「민사소송법」 제5편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의 수행과 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서류의 전자적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어렵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미래를 예측하여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추진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산된 체계 하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즉, 인터넷은 콘텐츠, 플랫폼, 기기,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시장진입 및 활동 규제를 완화 내지는 합리화하며, 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설비를 정비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법제도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정책 추진체계의 충돌의 문제이다. 인터넷 서비스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의 경쟁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터넷 서비스 진흥이 추진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조정해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상은 달성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최근 전자거래기본법 전면개정 추진 과정에서와 같이 특정 부처가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 개정 사항을 모두 누락시킨 것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넷째, 신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율 공백의 문제이다. 현행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률은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별로 각각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터넷과 관련하여 새롭게 출현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의 문제점

(1) 현행 분류체계의 특징과 내용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로서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2008)가 있다.³²⁾ 제9차³³⁾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³⁴⁾는 정보관련 산업의 구조 변화 및 통합화 경향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대분류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산업 활동, 즉, 컴퓨터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나의 중분류로 통합하고 있다.³⁵⁾

3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분류 또는 생산활동분류를 내용으로 하고 생산활동에 관련된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산업구조 및 산업간 상관성 분석에 필요한 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EU의 유럽산업분류(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등이 있다. 여기서 '생산활동'이라 함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원하는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을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말한다. 황호을,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 조세통람사, 2000.; 김정언 외 4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및 IT 산업 분류체계 개산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7, 36면 각주 7 참조.

33)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UN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2007년 12월 28일 개정·고시되었다.

3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 ISIC)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이 분류는 1963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여덟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발전되어 왔다.

3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 대분류로서 전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 산업', 즉, 출판,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어 대분류를 구성하였다. 특히 출판업에는 기존 출판영역 이외 프로그래밍(주문형)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출판(패키지형)이 포함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화율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세분하였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세분류에서 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신설하고, 하위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세분하였다. 기존 출판업에서 기록매체 출판업은 제외(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에 포함)하였으며 방송업에서는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고려하여 유선 및 위성방송업에 기타 방송을 포함하여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조정하였다. 통신업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

정보통신기술산업특수분류는³⁶⁾ ‘정보통신기술산업’(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2010년 OECD 과학기술산업위원회(STI Committee)의 정의에 따라 “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 및 표시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 및 통신기능을 실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대분류하고 분류의 완결성을 위하여 부호화하고 있다.³⁷⁾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서비스 분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 4개 부문으로 구별하고 각 부문별로 세부적으로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산업분류체계는 인터넷산업을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창출하는 기반산업, 지원산업, 활용산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010년 한국인터넷백서의 분류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인터넷비즈니스, 인터넷융합서비스³⁸⁾, 공공부문서비스³⁹⁾’ 등 4개 부문으로 구별하고 각 부문별로 인터넷 서비스를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커뮤니케이션⁴⁰⁾, 엔터테인먼트⁴¹⁾, e-러닝, 인터넷뉴스, 인터넷광고, 커뮤니티⁴²⁾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인터넷비즈니스

는 부가통신업과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조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업을 삭제하였고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과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을 ‘유선통신업’으로 통합하였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36)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된 이후 OECD의 국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차 개정된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 분류를 개정하여 2010년 2월(v.1)과 2011년 4월(v.2)에 각각 공시하였다. 특수 분류를 개정함에 있어서 통계청은 첫째,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및 OECD의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특성 및 이용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며, 관련 통계 작성 또는 개발을 위한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7) 2010년 2월과 2011년 4월 각각 고시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수분류 v.1, v.2’에 따르면 OECD의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 변경에 따라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정보통신기술산업과 구분하여 제외하고 있다. v.1과 v.2의 차이점은 분류의 완결성을 위하여 특수 분류 내의 대분류(제조업, 서비스업)를 부호화하고, OECD 기준변경으로 v.2에서는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95122) 통신장비수리업’을 ‘유선통신장비, 방송장비, 이동전화기, 기타 무선통신장비를 주로 임대하는 사업체로 한정하였다. 그 밖에 OECD기준변경 또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포괄범위 불일치로 일정한 산업을 삭제하였다.

38) IPTV, 인터넷전화, WiBro.

39) 대국민서비스, 대기업서비스, 정부간서비스.

40) 이메일, 인스턴트메신저, 인터넷전화, 웹컨퍼런스, 통합커뮤니케이션.

41) UCC, e-러닝, 음악 등.

42) 카페, 클럽, 블로그, SNS.

의 경우 e-비지니스⁴³⁾, m-비지니스로⁴⁴⁾ 분류한다. 통계표준분류 중 인터넷산업 분류에 관하여 통계청은 인터넷 서비스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활용산업⁴⁵⁾, 기반 산업⁴⁶⁾, 지원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

현행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는⁴⁷⁾ 기기 및 네트워크, 네트워크 운용, 네트워크 활용의 3분류 하에 기존의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기존 정보화정책의 핵심이었던 하드웨어 인프라의 구축, 즉 하드웨어로서의 기기와 하드웨어로서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중심에 두고, 이를 운용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법제의 체계도 하드웨어에 대한 규율 및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규율, 개별적인 이슈나 특정 산업군을 위한 입법을 통하여 다수의 법률이 인터넷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시장은 방송·통신 융합 영역 이외에 실생활과 연결된 서비스, 기계와 연결된 서비스, 미디어 기능과 결합한 서비스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43) 전자상거래, 금융거래서비스, SaaS서비스.

44) m-컨텐츠, m-커머스, m-커뮤니케이션, 유무선통합서비스.

45) 활용사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로서, 응용서비스, 콘텐츠 제공업, 인터넷 거래업, 기타 활용업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응용서비스에는 응용프로그램 임대업, 포털서비스, 인터넷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되면 콘텐츠 제공업에는 종합정보 제공업, 엔터테인먼트 제공업, 전문정보 제공업 등이 해당된다. 인터넷 거래업에는 B2C·C2C 상거래업, B2B 상거래업, B2G 상거래업 등이 포함된다.

46) 인터넷 기반 산업으로 인터넷장비 제조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네트워크설비 임대·운영 대행업으로 세부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장비 제조업에는 단말장비 제조업, 네트워크장비 제조업 등이 포함되며,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에는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비 임대·운영 대행업에는 인터넷백본 임대업, 가입자 접속 망 임대업, 설비대여 및 운영·대행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지원 산업으로 시스템 구축업, 보안 솔루션 제공업 등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과 컨설팅, 마케팅, 거래지원 서비스 등 컨설팅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47) 국내 분류체계의 경우, 통계청의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통신기술산업 특수분류,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서비스 분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산업분류체계, 2010 한국인터넷백서의 분류체계 등이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UN 경제 사회처 통계국 정보통신기술 산업분류, NAICS의 정보산업분류 등이 있다.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시장의 초점도 하드웨어로서의 기기나 네트워크의 구축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에 맞춰지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하드웨어보다는 서비스, 특히 방송통신의 네트워크 수준의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로 대분류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수준은 융합 및 접근성 확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반면에, 활용 서비스는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규제체계와 그 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류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수평적 규제 체계⁴⁸⁾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규율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류도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⁴⁹⁾ 또한 기존의 서비스 분류체계는 신규서비스가 나오면 이를 기존의 서비스 분류체계 중에서 비슷한 분류로 포섭하거나 기타 활용업으로 구분하게 되어 실제의 서비스 분류와 비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⁵⁰⁾

48) 수평적 규제체계는 새로운 융합 환경에 대한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대안으로서 미국의 계층(layer) 규제모델로부터 비롯되었다. 수직적 규제체계는 특정 네트워크/서비스별로 별도의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송 네트워크를 통한 방송서비스는 방송규제로,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서비스는 통신규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 현상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특정 네트워크/서비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하는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의 핵심이다. 이상우 외 7인, 『통신방송 융합 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2, 36~36면. 고순주, “EU, 미국, 일본의 방송통신에 관한 수평적 규제 법체계 개편 비교 분석”, 『과학기술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 2010, 204면.

49) 이를 통하여 서비스분류에 따라 어떠한 규율체계의 규제를 받는지가 보다 명확해지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50) 수평적 규제환경에 적합하도록 업무 간 중첩환경을 반영하여 실제 서비스 시장을 기준으로 규제의 단위를 설정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확정을 통한 규제단위 설정으로 융합 환경에서 서비스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박동욱 외, 『통신사업 업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2, 93면.

3.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추진체계의 문제점

(1) 공정경쟁과 상생협력 관련 규정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제11조를 통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관하여 노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도 공정경쟁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의 공정경쟁의 촉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9조의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유통질서의 확립 등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관련 규정이 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포함하여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관련 규정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관련 규정 현황

구 분	법 률 명	조 문
공정경쟁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2) 추진체계의 문제점

최근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된 사례가 자주 제기되고 있으나⁵¹⁾, 현행 인터넷 관련 법제도에는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특정한 금지행위가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한편 인터넷 광고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은 광고주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등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⁵²⁾ 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한 시장의 지배력이 연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51) 해외의 'Google/Double Click 사례'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하여 플랫폼의 지배력을 다른 곳으로 전이할 수 있는 유인과 능력을 형성하여, 구글의 검색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광고시장으로 부당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 검색포털이 가격비교 서비스로 진출하여 기존 가격비교부문 경쟁 사이트에 방문자가 급감하거나 사업을 중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다.

52) 김성환 외,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27~28면.

4.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보호체계의 문제점

(1) 이용자 권익보호 규정과 분쟁조정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4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장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권리와 아울러 정부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넷 이용 상의 분쟁과 관련하여,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언론중재위원회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제도는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분쟁조정기구는 개인분쟁조정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 약 9가지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표-3〉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조정기구의 주요 현황

기구 이름	근거 법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10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 제48조의2

(2) 추진체계의 문제점

현행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⁵³⁾ 보호에 관한 규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 등이 연계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의 체계 내지 각각의 주체들을 통합하여 이용자보호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하다.⁵⁴⁾ 또한 기타 세부적으로 인터넷 광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권익침해⁵⁵⁾ 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상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⁵⁶⁾

침해의 속도와 폭이 크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소비자단체 등이 연계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교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정은 이러한 각 당사자를 연계한 정보교환의 시스템이 부족하며,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에 특화된 재판

53) 이용자의 개념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개념이다. 즉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영업활동을 위하여 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자도 이용자의 범주로 포섭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생산에서 유통을 거쳐 소비에 이르는 순환 과정에서 최종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므로 통상 중간 이용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전제로 함에 반해, 이용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용자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보호는 계약 체결 과정 또는 내용의 공정성 보장, 기본권에 근거한 계약자유원칙의 수정,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호의무, 배려의무 등의 특별한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갖는다.; 김태오,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의 쟁점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2009. 5, 259면.

54)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산업에서는 경쟁법과 소비자법에 의하여 포착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넓은 의미의 이용자보호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법과 소비자법에 의하여 포착되기 어려운 고유한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익과 시민의 이익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넓은 의미의 이용자보호제도를 필요로 한다. 홍대식, "방송·통신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의 개선",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229면.

5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서, 광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신문,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56)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가입, 이용, 해지의 각 단계 중 가입 단계에서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느끼고 있고, 이용자 피해와 관련하여 상당수가 가입단계에 있는 것들로 이는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준·정진한·김진성, 『방송통신 이용자관점 정책평가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1, 182~186면.

의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⁵⁷⁾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⁵⁸⁾ 이와 더불어 이용자 리터러시(literacy)에 대한 규정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5. 인터넷 자율규제 추진체계의 문제점

(1) 자율규제 관련 규정과 추진 현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⁵⁹⁾는 자율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자율규제의 목적을 ‘이용자보호’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에 두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해당 단체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민간 자율기구의 경우, 대표적인 자율기구로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⁶⁰⁾,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KIAD

57) 온라인 분쟁은 기존의 분쟁과 달리 공간적 제약 없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의 서로 다른 법률체계 하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분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국가 내에서조차 구체적인 시행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국제적 합의를 하여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제적 분쟁조정기능을 확대하여 분쟁처리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지만, 분쟁당사자가 온라인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소비자나 기업으로 하여금 시간, 장소 등의 물리적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보다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영찬 외, “온라인 대체적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1호, 2007.5, 46면.

58) 참고로 영국의 Ofcom은 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 불만처리 및 분쟁이 해결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법 Section 52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불만처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불만실행규약(Complaints Code of Practices; CCOP)을 제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불만처리와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는 불만실행규약에 따라 불만을 제기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해 주도록 한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에게 대안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수행할 수 있도록 Ofcom이 승인한 분쟁해결 기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원,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관련 세부시행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11, 36면.

5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라는 제목 하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KISO는 2009. 3. 국내 7개 포털사의 협의로 발족되었다가, 현재는 6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를 실현하고 동시에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사회적 책무 및 공공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동 기구는 이사회, 정책위원회,

O)⁶¹⁾가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광고물이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에서 부정클릭, 불법·유해광고의 유통 등의 역기능이 등장함에 따라 2009년에 설립된 인터넷 광고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서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표-4〉 현행 자율규제 관련 규정

법 률 명	해당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율규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업무)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사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책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와 회원사의 게시물관리 책임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KISO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 정책결정사항은 25건이고, 그중에서 회원사의 게시판 정책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정책결정’을 다수 내놓기도 하고 있다. 정책결정 내용은 홈페이지(www.kiso.or.kr)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고, 활동사항은 「KISO 저널」이라는 정기 발간물을 통하여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회원사의 게시물 중 불법, 불건전 게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수행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KISO에서는 회원사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 61) KIADO는 인터넷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자체 모니터링과 자율심의를 통해 위법·유해, 불건전 광고물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광고 적정성 자문을 통해 광고 집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유해광고물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산하 조직으로는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인터넷광고정책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자율규제)
청소년보호법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의2(네트워크정책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규제의 선진화)

(2) 추진체계의 문제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의 발전과 영향력의 증대에 비례하여 인터넷에 대해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를 혼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급격한 인터넷 기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정부나 기업, 이용자의 역할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의 육성과 지원 규정을 포함한 자율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구의 자율규제의 활동과 노력은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터넷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터넷의 자율규제는 자율규제를 위한 정부나 기업, 이용자의 역할에 관한 규정, 정부의 자율규제의 육성과 지원 규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의 주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단체’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더불어 정부 및 이용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⁶²⁾

민간 자율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경우에는 인터넷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인터넷 정책의 혼선을 방지

62) 정부의 개입여부와 관련하여 규제 도입 또는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정욱 외,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6, 5면 참조.

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참여 회원사의 범위가 협소하고 행동강령의 부재로 인하여 회원사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⁶³⁾ 또한 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회원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사의 출연 자금만으로 운영되는 점, 공적 심의기관 등 정부 영역과의 공식적인 협력 네트워크 또는 협력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⁶⁴⁾

6. 국제협력 추진체계의 문제점

(1) 국제협력 관련 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에 국제협력 관련 규정이 있다. 이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⁶⁵⁾

63) 양승찬 외,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 바람직한 협력방안 모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보고서, 2009, 91면.

64) 유정석·김용국·고아라,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2010, 8, 31, 61면.

65)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5〉 국제협력 입법례

법 률 명	관련조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국제협력)
인터넷가판 서비스 기본법(시안)	제43조(국제협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4조(국제협력 등)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국제협력)
영상진흥 기본법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2) 문제점

인터넷 침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속성상 한 국가의 노력에 의하여 정책의 효용성이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정책을 수립에 있어서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공동연구 개발 사업 지원 및 공동의 대응체계 마련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시책 추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인 형태의 규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IV. 결론 : 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현행 인터넷 진흥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각각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 서비스의 통합적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하고도 다양한 발달과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력이 특정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 기기, 유무선 네트워크, 플랫폼, 개별 서비스, 콘텐츠의 융·복합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시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 수립·집행권을 한 부처가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플랫폼, 기기, 서비스가 융·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현재의 분산된 규율체계로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첩적 규제 또는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되고 집중화된 인터넷 서비스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정책의 추진체계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단일한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⁶⁶⁾ 통합적인 콘트롤 타워를 통하여 소관별로 중복된 정책의 추진을 방지함과 동시에 부처별 진흥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현실적인 조정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적인 단일 콘트롤 타워를 통하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미래예측을 통하여 실현방법과 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하여 핵심 사항 혹은 중점 추진 사항 중심으로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의

66) 이를 위해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정책을 통합하고, 기존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약화된 부처 조정기능을 강화·집중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강화하거나 조정기능을 새로운 콘트롤 타워에 맡겨서 기존의 진흥정책을 쇄신하여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⁶⁷⁾

둘째, 신규 인터넷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는 인터넷 서비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활용서비스, 지원서비스, 기반서비스로 나누어 왔으나, 이러한 유형 분류로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규 인터넷 기반서비스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⁶⁸⁾ 현행법상 분류체계로는 신규 인터넷 기반서비스들이 단순히 기존 서비스 체계에 포섭되는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제를 여기에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⁶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규정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규정의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관련 법제 간의 대응성이 감소하고 혼잡성이 증대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관련 법률들을 포섭하는 한편, 신규 인터넷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하고⁷⁰⁾, 기존의 정태적 분류방법에서 벗어나 인터넷서비스의 기능

67) 기본 계획의 경우 ① 인터넷 산업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② 인터넷기술의 혁신에 관한 사항, ③ 인터넷기술의 보급·확산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④ 인터넷 리터러시 및 인터넷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인터넷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⑥ 인터넷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 ⑦ 인터넷기업의 해외진출지원, ⑧ 지방의 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⑨ 그밖에 인터넷산업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8) 기존에는 인터넷서비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활용서비스, 지원서비스, 기반서비스로 나누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분류는 새로이 생성되는 신규서비스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로서 UCC, SNS 등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와 'OPEN API', 'OPEN CAST' 등 개개인의 취향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인터넷 기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 서비스 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법제를 여기에 단순히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69) 특히, 최근에는 등장했던 '세컨드라이프'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는 기존 인터넷상 서비스라는 이유로 오프라인 상 서비스에 비해 규율의 정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컨드라이프'는 인터넷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습이 오프라인상의 생활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이용자 간 대화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광고 등의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등의 복합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터넷상 거래는 오프라인상의 거래로 연결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서비스로서 규율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프라인상의 문제로 규율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70) 기존의 정태적 분류방법에서 벗어나 인터넷서비스의 기능 또는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인터넷서비스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는 우선 인터넷서비스를 '콘텐츠

또는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재분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 기반환경 조성⁷¹⁾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내용은 1) 기반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2) 계획의 수립(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통계 조사 포함), 3) 인력의 양성, 4) 기술개발의 지원, 5) 표준화의 추진⁷²⁾, 6)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7) 산업지원책⁷³⁾ 등이다.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대분류하고 각 서비스의 구체적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세부 분류를 시도해야 하며, 세부 분류의 기준은 인터넷서비스의 개방성·미래지향성·포괄성 등이 특징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인터넷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산업계 분류와 같이 인터넷서비스 유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구체적인 인터넷서비스의 기능을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기능별 분류 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기능을 무작위로 선정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선정하여 이를 묶어 내는 것이 인터넷서비스를 분류함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71) 인터넷 기반 환경 조성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시스템은 물리적 레이어, 논리적 레이어, 콘텐츠 레이어로 구성되는 각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각 레이어에 있어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는 (i) 기반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ii) 계획의 수립(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통계 조사 포함), (iii) 인력의 양성, (iv) 기술개발의 지원, (v) 표준화의 추진, (vi) 국제협력, (vii) 산업지원책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물리적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보통신망이 원활하게 구축되고 운영되며, 적절한 시기에 고도화되어야 한다. 논리적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기술개발도 일차적으로는 하드웨어제조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의 과제로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직접 기술 개발하여 민간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모든 트랙픽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망 중립성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72) 표준(standards)이란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방법·규격·절차 등을 정해 놓은 것이고, 표준화(Standardization)란 표준을 개발·발굴하여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준화는 상호호환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표준제도는 '국가표준기본법'을 기본법으로, 산업표준에 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정보통신표준에 관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도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에 진흥을 위한 특화된 표준화를 추진하여 보다 구체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73) 현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제19조에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제지원 및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설비를 구축,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의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원내용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내용을 마련함에 있어서 양질의 인터넷 콘텐츠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이용자의 이익 보호 등에 대한 고려가, 소극적으로는 개인 정보 또는 기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에 특화된 콘텐츠의 창출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⁷⁴⁾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 공공 인터넷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장기적 비전을 포함한 기본정책, 2) 기업의 인터넷 콘텐츠 제작 환경의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3) 인터넷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⁷⁵⁾ 등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인터넷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의 거래비용을 감소하고 유통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터넷서비스 품질인증 제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적 활동의 보장 및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존 시장은 생산자 혹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이해에 따라 거래가 형성되는 반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상호작용하여 가치가 창출되며,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등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기능을 하는 사업자가 복수의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형태로 거래 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징을 고려한 공정경쟁

74) 현행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각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에 특화된 창출 및 활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75)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과 관련해서는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품질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수립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 상생협력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사후적으로 불공정성을 감시하는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적인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공정경쟁 및 시장상생을 이룰 수 있는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갖추 필요가 있다. 반면,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자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새로운 분야의 신규 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보호,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자의 광고 행태나 서비스의 중요사항의 설명의무⁷⁶⁾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규율상의 문제점⁷⁷⁾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분쟁처리 해결을 위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상 발생된 피해에 관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76) 전기통신서비스의 복잡화, 고도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분쟁처리와 상담대응체제를 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웹페이지에 알기 쉬운 곳에 문의할 것을 게재하고, 계약시에 먼저 문의할 리스트를 배포 하는 등 각 관계자가 적절한 상담창구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통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에서 전자메일로 상담접수를 받을 경우 계약시에 이용자에게 그 취지를 주지시키고 전자메일에 의한 상담에 대한 답변까지 얼마의 소요시간을 걸리는 지 명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에서의 콘텐츠서비스가 있는 경우 자사에 의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 주의환기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상담창구의 정보제공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77) 현행법제도는 타깃광고를 스팸과 유사하게 접근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동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상업적 이용에 관한 의사표시의 흠결을 전제로 하는 사안인 까닭에 개인정보 관련 권리침해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충돌되는 법익이 존재하므로 적정규제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져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시광고공정화법이 광고의 개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블로그 광고도 규제 대상이 된다. 문제는 블로그 광고의 유형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어느 범위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의 자율규제방법으로 사전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대상범위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가 매체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강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사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한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형식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광고 형식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정보가 아닌 한 광고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책임분담⁷⁸⁾과 인터넷 서비스에 특화된 ADR에 대한 기준 마련⁷⁹⁾ 및 사업자·소비자단체나 관계 업계와 관계행정기관이 널리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하는 관계자의 연계방안 체제⁸⁰⁾ 마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리터러시(literacy)의 강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⁸¹⁾

일곱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의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체계는 ① 불법정보나 권리침해정보 및 유해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⁸²⁾, ② 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육성 및 지원⁸³⁾,

78) 사업자단체에서 콘텐츠서비스 등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에 관한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용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는 등의 체제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콘텐츠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대응에 있어서는 콘텐츠 제공사업자, 소프트웨어 등 관계된 주체가 많다. 이용자대응에 있어서 협력이나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79)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재판외분쟁처리에 대해서는 내용에 전문성이 높고, 소액분쟁이 많은 점, 동일한 처리가 가능한 분쟁이 유형적으로 생기는 점 등 분야별로 독자적인 기관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 재판외분쟁처리하는 정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그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형태가 바람직하다.

*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조정기구의 주요 현황

기구 이름	근거 법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10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 제48조의2

80) 행정과 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의견교환을 하는 장, 더 나아가 소비자단체나 관계 업계와 관계행정기관이 널리 정보교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관계자간에 의한 이용자보호시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81) 계약자는 계약시 설명을 듣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서 등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메일매거진이나 광고(CM) 등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2) 인터넷 자율규제의 목표는 이용자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불법정보나 권리침해정보 및 유해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홍보는 자율적인 활동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원체계, 방법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83) 자율적인 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이용자를 기초 단위로 하지만, 그 개인이 모인 기관이나 단체가 그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 조직된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육성 및 지원책으로는 인터넷

③ 인터넷서비스 인증마크의 도입 및 시행 지원⁸⁴⁾, ④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의 지원⁸⁵⁾, ⑤ 세제 지원⁸⁶⁾, ⑥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복규제의 제거⁸⁷⁾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법을 통한 이러한 자율규제의 지원체계가 지원 및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자율규제를 강요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후원자의 지위에서 최소한의 간여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장려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자율규제의 내용을 제시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의무로 주어진 사항이 아닌 적극적으로 선택할 사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최근의 입법례에서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필요에서도 국제 협력에 대한 입법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의 국제적 속성상 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기반 마련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관련 국가와의 역외적용 상호인정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⁸⁸⁾ 또한 글로벌 인터넷 이용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와 관련된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대신 관련 사업이나 과제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

- 84) 인터넷에 있어서 자율적인 활동이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에 인증을 통한 장려책도 도입할 만하다. 인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영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 85) 자율적 활동을 하는 협회나 단체의 경우에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일반적인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단체에게는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는 해당 자율적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자율규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86) 자율규제 관련 업무에 시행하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면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면세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87)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면제케 할 것인가 즉 필요적 면제 또는 임의적 면제를 규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자율규제의 효율성 제고차원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다른 불법행위의 유형과의 비교나 유사한 유형 등을 통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사업자의 책임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규제 내용이 정부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제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하여 등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시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관련성을 갖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해외 협력을 통한 산업진흥의 보장과⁸⁹⁾ 국내외 인적 교류의 지원⁹⁰⁾, 해외 정책 자료에 대한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을 통한 국제세미나의 상시적인 개최 등의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관련 정책 및 사례의 연구 등 지원 방안⁹¹⁾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1. 12. 25, 논문심사일 : 2012. 06. 22, 게재확정일 : 2012. 06. 25]



핵심어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기반 서비스, 인터넷 진흥 정책, 자율규제

- 88) 예컨대, DDoS 공격 등의 불법적인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 89) 인터넷서비스의 해외 마케팅, 홍보활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도와주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는 기술개발이나 국제표준화 등에 있어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90) 국제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교류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해외 연구 인력에 대한 초빙사업 등은 물론이고,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세미나 등에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91) 인터넷서비스는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도 국제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에서 각국의 정책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의 상시적인 개최와 해외 정책 자료에 대한 연구전담부서의 설립 등이 중요한 국제협력의 예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성환 외,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김정언 외 4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및 IT 산업분류체계 개선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박동욱 외,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0.
- 변정욱 외,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6.
- 양승찬 외,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 바람직한 협력방안 모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보고서, 2009.
- 유정석·김용국·고아라,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의 협력 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2010.
- 이상우 외 7인, 『통신방송 융합 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임 준·정진한·김진성, 『방송통신 이용자관점 정책평가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0.
- 한국전파진흥원,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관련 세부시행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
- 황호을,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 조세통람사, 2000.

[학술논문]

고순주, “EU, 미국, 일본의 방송통신에 관한 수평적 규제 법체계 개편 비교 분석”, 『과학기술법연구』 제13권2호,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 2010.

김태오, “통신시장 이용자보호의 쟁점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2009.

이영찬 외, “온라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1호, 2007.

홍대식, “방송·통신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의 개선”,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The Study on Systematization of Legislation for Internet-based Services Promotion

Hong, Dae Sik

(Professor,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Lim, Duk Gi

(Ph.D. Korea Copyright Commission Distance Learning Team
senior staff, Sogang University instructor)

The Internet use environment is expected to change rapidly. Accordingly, to flexibly cope with these change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et Services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olicies that aggressively invigorate internet use. Future policies and legal systems for promotion of Internet use must tak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based services into consideration and come up with ways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romotion policy for enhancement of the reliability of Internet-based services and conten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s. Al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sound Internet use culture and fair competition and win-win cooperation amo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entry barrier must be lowered so that new Internet-related

enterprises can enter the market more easily and the support system must be instituted. In consideration of the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the foundation for global cooperation in regard to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of Internet-related laws must be laid down, and the grounds for cross-recognition of extraterrestrial application in related countries must be prepared. That is, efforts must be made to figure out ways to enhance the global governance competency.



Key Words internet service, internet-based service, internet promotion policy, self-regulation.